

II. IMF 경제 정보

1. 아시아 경제위기와 일본의 역할

- (아시아 위기와 일본의 연관성) 일본경제는 아시아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, 최근 아시아 위기와 일본경제의 침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동시에 나빠지는 악순환을 보이고 있음
- (일본의 역할 기대) 일본 정부는 악순환의 고리를 풀기 위해 과감한 경기 부양책을 펼쳐야 할 것임. 아울러 수입을 규제하는 각종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한국 및 아시아 경제에 수출의 활로를 열어 주어야 할 것임

○ 아시아 위기와 일본경제의 연관성

- 아시아 위기의 발단은 1990년대초 일본경제의 거품이 붕괴되면서 일본 기업과 은행들이 超円高를 배경으로 아시아지역 진출을 대거 확대하면서 시작되었음
 - 아시아 각국은 풍족한 외국 자금으로 높은 성장을 구가하였음. 하지만 초저금리로 공략해 들어온 일본 자금이 부동산, 주식 등에 집중 투자되어 부동산 및 주가를 급등시키고 경제 전반에 거품을 조성하였음
 - 경기가 과열됨에 따라 소비와 투자는 급증하였고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었음
- 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으로부터 거액의 단기자금을 차입하여 이것을 장기부동산 투기에 이용함
 - 소위 「自轉車 操業」 방식의 외화조달로는 단기외채의 상환과 이차지불이 어렵게 되었으나, 용자중개업자인 현지은행도 정부의 公的支援에 의존하여 구조조정 노력을 게을리 함
 - 이에 따라 외국 투자자들이 통화와 주식을 대량 매각함으로써 금융 및 외환위기를 초래하였으며, 이에 당황한 일본 금융기관들이 대출금 회수에 나섬으로써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과탄을 가속화시켰음
- 결국 90년 이후 일본 경제의 혼미는 아시아 통화위기의 원인을 제공했으며, 그로 인한 아시아 각국의 경제위기는 일본경제에 부메랑으로 되돌아 왔음
 - 일본은 최근 수년간 내수가 침체를 보이면서 수출로 내수 부진을 보전하는 추이를 보여왔는데, 아시아 경기 침체로 수출마저 큰 타격을 받을 경우 일본의 경기 침체는 한층 심각한 상황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음
 - 한편, 최근 일본의 경기 침체는 일본에의 시장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지역의 수출에 큰 타격을 가함으로써 아시아경제의 위기 탈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

- 그러므로 일본 경기와 아시아 위기는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, 특히 최근 상황은 아시아 위기와 일본 경제의 침체가 서로 나쁜 영향을 주고 받는 악순환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찾을 수 있음
- 아시아가 위기에서 벗어나고 일본경제가 살아나려면 악순환의 고리를 어느 한쪽에서 끊어줘야 하며 그 역할을 일본이 담당해야 한다는 점에 論者들의 인식이 일치하고 있음

< 최근 일본의 경제성장률 추이 >

(단위: %)

연 도	1991년	1992년	1993년	1994년	1995년	1996년	97 1/4	97 2/4	97 3/4
실질GDP 성장률	3.8	1.0	- 0.3	0.6	2.8	3.2	2.0	- 2.8	0.8

자료 : 日本 經濟企劃廳

○ 아시아 위기에 대한 일본의 역할 기대

- 최근 일본경제가 다시 급격하게 침체되고 있는 것은 소비세 인상이라는 정책실패가 주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
- 1997년 4월부터 실시한 소비세율 인상(3%→5%)은 GDP의 60%를 차지하며 경기회복을 주도해온 개인소비를 급격히 감소시키고, 고용과 설비투자 확대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등 내수 위축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음
- 일본정부는 지난해 연말에 2조 엔 규모의 소득세 감면 조치를 단행하였으며, 또한 30조 엔 규모의 경기부양 및 금융위기 해결을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가 완화되는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음
- 현재 심각한 상태의 재정적자 문제 해결이 당면과제이나, 이를 다소 미루더라도 과감한 내수 부양책을 통해 위기에 직면한 아시아경제에 활기를 주고 동시에 일본경제도 침체의 늪에서 빠져 나오는 것이 최선책으로 보임
- 2월 21일 런던에서 열리는 G7 재무장관·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도 내수 진작을 위한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쓰라는 요구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임
-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2조 엔의 특별감세를 1998년도에 한정하지 말고 항구화하자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음
- 이와 함께 수입을 규제하는 각종 관세·비관세 장벽을 완전 철폐함으로써 한국을 위시한 아시아경제에 수출의 활로를 열어주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임

(정 오 영 oyjoung@hri.co.kr)